젊어진 의회 의욕적 활동·사전준비 철저

■제6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결산

과장 확대 해석·언론보도 집착 비판도

제6대 광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9일 열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의원들 대다수가 초선인 만큼 사전 준비와 함께 의욕적인 활동을 보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대부분은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일부 다선 의원들은 관록을 보여줬고, 과거 시의회와 비교해 볼 때 '성역없는 감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분야는 분야는 사회·복지와 산업건설 분야였다.

김보현 의원이 주장한 사회·복지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문제와 문상필 의원이 지적한 부랑인 관리 허점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또한, 강은미 의원의 제1망월묘지 위탁업체의 방만한 운영 지적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로부터 사무위임 또는 기관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각종 사회복지 기관의 문제점과 관리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켰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3선인 손재홍 의원은 광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중앙부처 예산 27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동안 관심대상 밖이었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자재 관리 문제를 지적해 다선의원으로서 관록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선인 조호권 의원은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하는 등 연일 굵직한 사안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고, 진선기 의원이 개선을 촉구한 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와 노후화된 학교 건물 안전진단 문제도 눈길을 끌었다. 이은방 의원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하수처리장의 하수 기준치 초과배출 등을 지적해 관심을 받았다.

특히 일부 초선의원들은 과거 시의원들에게는 '성역'으로 여겨지고 민감하게 생각했던 채용문제와 계약문제 등을 들고 나와 집행부를 당혹하게 했다. 홍인화 의원은 관급자재 계약 특혜 의혹을, 송경종 의원은 상무콜센터 공사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을 지적했다.

조오섭 의원은 허울뿐인 광주시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했고, 광주지하철 역장 채용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지엽적인 문제를 확대하거나 언론에 보도되는데 집착해 부실한 질의내용을 작성하는 한계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의욕적이었고 사전에 충실한 준비를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소한 문제를 과장·확대 해석해 결과적으로 시정이 부정적으로 시민에게 비쳤다는 비판론도 있었다. 또한 시의원들의 공세에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성론도 나왔다. /최권일기자 cki@

"불에 안타는 쓰레기는 안됩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문상필) 소속 의원들이 18일 상무소각장을 찾아 불연성 쓰레기 포함 여부 등 반입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하철 역장 자격기준 '들쭉날쭉'

조오섭 시의원 "대다수가 공공기관 퇴직자" 특혜 의혹

광주지하철 민간위탁역 역장 모집기준이 수시로 바뀌고 선정된 역장 대부분이 지하철과 철도 관련 경력자가 아닌 공공기관 정년 퇴직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오섭 의원(민주·북구 2)은 18일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이 개통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역장을 했던 27명 중에서 지하철과 철도청 근무경험자는 4명에 불과하고 현재 14명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며 "대부분의 역장이 행정공무원과 군인, 경찰 퇴직자여서 고객만족과 안전관리에 있어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위탁 형식으로 모집한 현재의 지하철 역장 14명 중 6명이 시청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역장 연령 제한 기준이 61세 이하→58세 이하→62세 이하→50세 이상→62세 이하 등 7차례나 바뀐 것은 퇴직자 정년연령에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재의 민간위탁역 역장 모집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지하철역장 자리가 '로비'의 대상이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통해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역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하철역장은 임기 2년에 연임할 수 있으며 연봉은 3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김효석 의원

10번째 국감 우수의원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10번째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돼 주목을 끌었다.

27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8일 김 의원 등에게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 사실을 통보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000년 16대 국회 진출 이후 10번째다. 그동안 11번의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통합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던 2007년을 제외하곤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 과정에서 '10~20년 후를 내다본 7대 농정과제'와 '쌀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해법' 등을 제시, 피감기관은 물론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으로부터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 고심…중국 경고에 눈치

정부가 올해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국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55)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중국 정부가 "류샤오보를 지원하는 국가에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적 경고에 나선 것이 결정적 원인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노벨위원회측이 시상식 참석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시한인 지난 15일을 넘겨서 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며 "시상식 참석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상식 참석을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모이는 국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권 국가를 제외하고 아시아권의 상당수 국가들이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본도 참석 통보시한을 넘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17일에 가서야 뒤늦게 참석을 결정했다. 이는 그만큼 '슈퍼 차이나'의 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라는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한편 올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는 수상자 류샤오보는 말할 것도 없고 대리인조차 참석하지 못하는 노벨상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두시간 배타고, 비싼 돈 내고, 누가 가겠나?

전남 '동물의 섬' 타당성 논란

이용재 도의원 지적

전남도가 추진중인 '동물의 섬' 조성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이용재(광양 1·민주) 의원은 18일 열린 전남도 관광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안군 도초도에 추진중인 동물의 섬 조성 계획은 투입되는 비용에 견줘 육지 동물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에서 배로 2시간 넘게 들어가고 배삯과 관람비용을 포함하면 대략 4인 가족이 20만원 이상 지불해야 하는데다, 육지와 크게 다르지 않는 동물원이라는 점에서 가뜩이나 F1 대회로 재정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연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1324억 2300만원을 들일 가치가 있느냐는 것이다.

전남도는 앞서 2015년까지 신안군 도초면 발매리 1394-3번지 일대 219필지(71만4200㎡)에 전국 최대 규모의 사파리·조류관·해양동물관 등을 갖추기로 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난 5일 공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도는 연간 104억원을 벌어들여 5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한달 평균 8억5000만원을 거둬들일 때 가능한 금액"이라며 "열악한 교통편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근성 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다면 차별화할 수 있다"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日 정부 관계자도

"北 핵실험 징후"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등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들 통신에 따르면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는 17일 밤 "(일본) 정부도 위성사진을 확인했다"며 "(풍계리에) 새로운 갱도가 생겼다. 위성사진을 보면 명백하다.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핵실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위성사진'이 영국 군사정보회사인 IHS 제인스가 분석한 미국 디지털글로브사의 위성사진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진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17일 IHS 제인스의 위성사진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에서 터널을 뚫는 등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한화 투자운영 맡았던 여천NCC 사장 소환조사

협력사 수천억원 지원 경위 캐물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가 그룹의 투자운영 업무를 책임졌던 홍동옥(62) 여천NCC㈜ 사장을 17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홍 사장은 2007년 한화그룹의 투자운영 담당 부사장으로 활동했고 올해 한화와 대림 그룹의 합작사인 여천NCC의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그룹 측이 협력사인 편의점업체 ㈜씨스페이시스에 3~4년 전 수천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고자 홍 사장에게 당시 투자 경위와 김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그룹 계열사들이 씨스페이시스에 상호보증을 섰다가 고금리 상황이 닥쳤다.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당 보증관계를 정리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